

# 함평 사회단체 “정부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관련 보상을”

주민피해 보상 요구 농식품부 항의 서한  
방역대로 축산 기반 붕괴...생존권 보장  
스마트팜 등 5대 요구안 수용 강력 촉구

함평 사회단체가 정부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함평군

민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군부지 178만평이 강제 수용되고, 함평 송사리·보여리·동정리·복흥리 등 4개 마을 주민 187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정부는 주거단지 조성 계획만 내놓았을 뿐 정작 쫓겨나는 이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

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 오는 2027년까지 함평군 신평면 송사리 일원으로 옮겨오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가축 개량 평가와 낙농, 양돈, 초지 사료 등 4개 부서가 들어서며 약 200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는 스마트 축산 연구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협의회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가축 방역계(방역대)’ 설정에 따른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전 부지 반경 3km 내에 포함되는 신광·손불·군남면 일대 약 2천만평이 방역 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농가들은 사

실상 축산업을 꾸러나갈 수 없어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사업 대상지인 신평면 송사리 일원은 한빛원전으로부터 25km 이내에 위치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며 “방사선 고위험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자 불법”이라고 입지 선정의 적절성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에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주민 생계유지를 위한 스마트팜 30만평 조성(국·도비 지원) ▲방역대 밖 스마트 축사 15만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 5GW 지정 ▲이주민 정주 여건 및 생계 대책 조속 해결 등이다.  
오민수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회장은 “오는 23일까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 일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황칠 공예 본고장 완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내년 80억 투입 목공실·상상놀이터 등  
황칠 등 우수 전통문화 계승·발전 거점  
전문 목공인 양성·산림 치유 서비스도

완도군이 천혜의 산림 자원과 황칠 공예 본고장의 강점을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목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읍 가용리 편백숲 일원 산림치유단지 내에 도·군비를 포함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목재 문화 체험장’을 건립, 내년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목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하고, 전문 목공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체험장은 5천㎡ 부지에 연면적 1천500㎡ 규모로 지어진다. 1층에는 목재 체험실과 전문 목공 작업실, 자재실이 들어서며, 2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나무 상상 놀이터와 쉼터, 전시 판매실 등으로 꾸며진다. 야외에는 쾌적한 목재 정원과 전시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성 계획도〉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황칠나무 천연림 자생지이자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황칠 공예



의 본고장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완도 황칠’을 테마로 한 독창적인 체험 콘텐츠로 타지역 체험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장에서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목공예 페스티벌’을 개최해 군민 참여형 축제로 육성하고, 붉가시나무 숲 등 지역의 전통 산림 문화자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산림치유단지 내 숲속 야영장, 자연휴양림, 산림 레포츠 시설 등에 이

번 체험장까지 더해지면, 방문객들에게 종합적인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목재 문화 체험장이 완도 황칠 등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산림 복지 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목포 부흥동, 주민이 만든 ‘분홍빛 브랜드’ 눈길

洞 색·노래 제정...공동체 결속 강화  
목포 부흥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을 고유의 색(색)과 노래를 만들며 특색 있는 ‘동네 브랜드’에 나섰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동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동 색’과 ‘동 노래’를 제정하고 지난 9일부터 공식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부흥동은 앞서 지난 9월부터 주민들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동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랑과

순수, 따뜻함을 의미하는 ‘분홍색(Pink)’을 선정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삼향천 주변에 ‘핑크몰리’를 식재했으며, 내년 가을 삼향천변이 분홍빛 물결로 일렁이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도 이 ‘동 색’ 콘셉트를 적극 반영해 일관된 마을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함께 제정된 ‘동 노래’에는 지역의 역사와 정서가 고스란히 담겼다. 노을 진 향

구와 부추산 자락, 장미거리, 부흥교 등 지역 명소를 가사에 녹여내며 ‘다시 모여 행복을 나누는 동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곳’이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이번 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사용해 온 ‘모두가 부’리워하는 ‘흥’이 가득한 ‘동네’라는 구호와 어우러져 마을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종 부흥동장은 “주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만든 색과 노래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부흥동민의 매력과 자부심을 키워가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영광군 ‘국민행복민원실’ 정부 평가 재인증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입증  
영광군은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과 민원서비스 운영, 민원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간은 3년이다.  
영광군은 2021년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은 이후 2024년 제도전에서는 손잔을 마셨지만, 민원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과 도전을 이어온 끝에 올해 다시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확대 운영 ▲민원취약계층 전용창구 신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한 민원공간 환경 개선 ▲민원상담창구 재정비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등 군민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하며 군민 편의를 증진을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민원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청결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체계화 등 ‘군민 중심의 세심한 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은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광군 제공>

## 무안 공공건설 현장 주말 공사에 민원인 정보까지 노출

道 발주사업...일요일 공사 금지 불구 진행  
민원 제기 주민 개인정보 현장소장에 전달

전남도가 발주한 무안군 소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주말인 일요일 새벽 공사가 진행된 데 이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개인정보가 공사 현장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업계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2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긴급 보수·보강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 절차가 가능하지만, 해당 공사는 사전 승인이나 관련 서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 휴일에 위험공사를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대응체계 마련이 필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민원 접수 직후 주민의 이름과 연락처가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돼 현장소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 시공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요일 공사 여부와 별개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현장에 전달된 구조 자체가 주민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 주무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며 “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가 현장에 전달된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 신안군, 태양광 기자재 국산화 산업 육성 ‘맞손’

발전사·회원사 12곳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중인 신안군이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주도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사)신안 태양광산업협회와 ‘신안 태양광산업 기자재(인버터 등)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협약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협회 소속 12개 태양광 발전사와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산 자가 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관내 신규 및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 국산 기자재를 최우선으로 사용하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군의 국산화 지원 사업을 상호 연계해 공동 추진하고, 국산 장비 우대 정책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신안=양홍기 기자

## 강진군 “이동노동자 교육 받고 혜택 받아주세요”

17·20일 이틀간 교통법·세무 특강  
정비비·건강검진 등 최대 40만 지원

강진군이 배대 라이더와 택시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17일과 20일 이틀간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동노

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최신 도로교통법과 부가차세 신고 요령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 수요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 이수 노동자는 ▲안전용품 구입비 또는 정비 유지비(최대 20만원) 지원과 ▲건강검진 비용 환급(최대 20만원, 강진사랑상품권) 등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또는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정영록 기자